

# I.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920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16. 11. 16.
- 회부일자 : 2016. 11. 17.

### 2. 폐지이유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45만원 또는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42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산후조리원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조장과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상승 및 향후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손실 등에 대한 공적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 하는 등 대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 「안산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동 조례 폐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2015. 8. 10. 제정된 조례이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산후조리원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조장과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상승 및 향후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손실 등에 대한 공적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 하는 등 대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 본 조례폐지의 대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안산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234회 임시회 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안건 처리 시 조례안 부칙으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가 거론되었으나,
- 조례 제정부서에서 단독으로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제정 부서에서 폐지안으로 상정된 안건이며, 조례제정 후부터 현재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조례폐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II.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929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16. 11. 16.
- 회부일자 : 2016. 10. 17.

#### 2. 제안이유

-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를 개관(2016.10.10.)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과 생활 정보제공,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내·외국인의 상호소통 및 교류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내용

- 시 설 명 :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17. 5. ~ 2019. 12. 31.(2년 8월)  
※ 직영(개관 '16.10.10. ~ 2017. 5.)운영 후 민간위탁(최초위탁)
-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6길 37

##### 나. 운영현황

- 개 관 일 : 2016. 10. 10.
- 운 영 : 직영
- 주요사업 : 한국어교육, 방과후교실, 상담실 등
- 운영인력 : 강사 19명(통역·상담 2명, 강사 17명)
- 예 산 : 15,000천원

#### 다. 필요성

- 정부는 2007년 동포들의 대한 입국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고려인 동포의 모국귀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시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각종 체류상담 및 문화·체육활동과 생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를 '16. 10. 10. 개관하고 현재 직영 운영(개관일 ~ 2017. 5.)하고 있음.
- 직영 운영 후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과 정보제공,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내·외국인의 상호소통 및 교류 등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설치 및 운영)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고려인 동포의 입국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한 2007년 이후 고려인 동포의 모국귀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5,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우리 시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각종 체류상담 및 문화·체육활동과 생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를 2016. 10. 10. 개관하고 개관일로부터 2017. 5월까지 센터의 초기정착과 실태 파악을 위해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관리 하고 있음.
- 직영 운영 후 판단으로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과 정보제공,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내·외국인의 상호소통 및 교류 등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Ⅲ. 「안산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935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16. 11. 16.
- 회부일자 : 2016. 10. 17.

## 2.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로당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3호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은 제외하는 일부 조항을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로 일부개정 (안 제4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로당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3호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으로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대하여도 경로당 시설환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변경안건임.
- 그러나 조례변경안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세부명세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내 공용 부분인 경로당도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시설유지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안산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공주택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성유지비를 5년/1회, 3,000만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도 이 지원금으로 수선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 경로당의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 중복지원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증가의 부담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연립단지와 임대주택단지 내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로 개정 안 제4조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Ⅳ.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936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16. 11. 16.
- 회부일자 : 2016. 10. 17.

## **2.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명시

## **3.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정함(안 제2조)
- 안산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규제완화의 핵심과제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2조 제3호 「연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공원구중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연안관리법상 상위법위반으로 판단되며, 갈대습지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조성목적에 부적합 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2조 제4호인 「어촌어항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어항구역은 어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단체의 의견에 의하면 어촌계 등에서 기존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푸드트럭 진입을 반대하며, 지역의 대상자가 직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한바, 판매장소와 판매품목 지정 및 사업승인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도내 1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에게 특정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확대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불법행위자 단속과 무분별한 신규시설 발생을 억제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 취업애로청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V.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928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16. 11. 16.
- 회부일자 : 2016. 10. 17.

### **2. 제안이유**

- 단원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노인복지관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
- 설 치 일 : 2005. 2. 1.
- 시설규모 : 연면적 4,204.20㎡ (지하1층, 지상5층)

층 별	사 용 용 도	사 용 자	면적 (㎡)
지하1층	경로식당, 조리실, 기계실	복지관	515
1층	사무실, 대강당, 주간보호실, 상담실	복지관	878
2층	노인지회, 관장실, 재가복지사무실	복지관, 노인지회	890
3층	교육실, 목욕실	복지관	590
4층	교육실, 상이군경회	복지관, 상이군경회	590
5층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회, 재향군인회, 회의실	보훈단체	590

## 나. 위탁운영 계획

- 시 설 명 :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선부동)
- 위탁기간 : 5년(2017. 3. 1. ~ 2022. 2. 28.)
- 위탁방법 : 재계약
  - 근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시설규모 : 연면적 4,204.2㎡(지상5층/지하1층)
- 위탁사무 :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17명, 907,062천원  
(도비 35,000천원, 시비 872,062천원)

## 다. 재계약 사유

- 9년간의 사업경험으로 축적된 운영 능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
- 노인복지관의 필수사업을 비롯하여 선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종합서비스 제공이 용이

- 재계약 결정으로 직원들의 동요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근로의욕 상승으로 인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원구노인복지관이 2017. 2. 28.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에 5년간 재위탁 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 현재 위탁중인 수탁업체에 재계약 시에는, 선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9년간의 운영경험으로 인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이 동요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으로 경쟁 없이 재위탁을 추진한다면 현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생길 여지가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회를 보고 있는 다른 우수한 법인·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정행위가 될 수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하면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산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계약을 1회하여 9년간 위탁운영을 하였으므로 재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